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4143.55	↑ 코스닥	931.35
	(-11.30)		(+3.56)
↑ 금리	3.084	↑ 환율	1468.60
	(+0.050)		(+1.70)

저출산 고령화 뚜렷 ‘1인가구 급증’ 지역 거주 70대 이상이 20% 육박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데이터처, 전체 1인가구 804만
 전남·경북·강원 등 비중 높아
 “그동안 1인가구 지원에서 소외
 중·장년층, 특히 남성 주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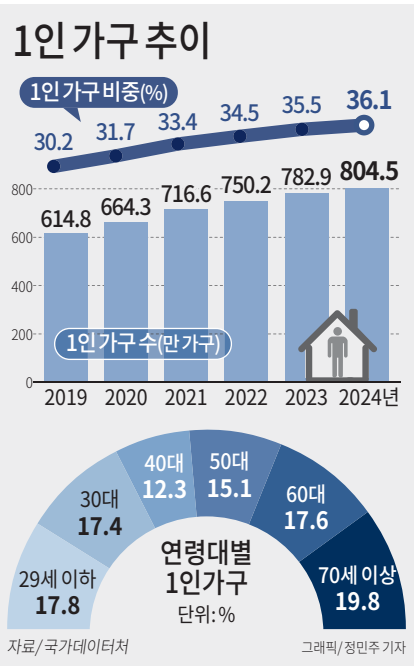
국내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이유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군(郡)지역 등 비수도권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1인가구 중 노령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가구 수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에 달했다. **〈관련기사 3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역대 처음 30% 선을 넘어섰다. 이후 2020년 31.7%,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 2024년 36.1%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1인가구 중에서는 70세 이상 1인가구(19.8%)가 가장 많았다.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50대(15.1%) 순으로 집계됐다. 40대 1인가구(12.3%) 수는 가장 적었다.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등의 집



계에 따르면 노령 1인가구는 전남과 경북, 강원 등지에서 특히 비중이 높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에 우선적으로 진입한 상위 3곳이다.

노령 1인가구 수는 급속한 고령화와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 정책센터가 펴낸 한 보고서는 “앞으로 점차 젊은 1인가구보다 노령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이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센터는 “그간 1인가구 지원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특히 남성 1인가구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42.7%는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22.1%), 서울(20.6%), 부산(6.8%), 경남(6.2%), 경북(5.7%), 인천(5.1%)의 순이었다. 전체 가구(서울 18.7%, 경기 25.1%)와 비교하면 서울 거주 비율은 더 높고, 경기 거주 비율은 더 낮았다.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39.0%)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35.9%)와 연립·다세대(11.7%)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단독주택 27.7%, 아파트 53.9%)와 비교하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낮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높았다.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에 비해 24.9%포인트(p) 낮았다.

절반에 가까운 49.6%의 1인 가구는 40㎡ 이하 면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는 13.0%, 50~60㎡는 11.6%, 60~85㎡는 18.0%, 85~102㎡는 3.9%, 102~135㎡는 3.2%, 135㎡ 초과는 0.5%를 차지했다.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85.3%,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85.7%로 조사됐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이웃과의 관계(88.4%),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87.6%),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87.5%) 등에서 높았고, 문화시설 접근 용이성(38.6%), 주차시설 이용편의성(29.8%), 의료시설 접근용이성(24.3%) 등에서는 낮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고객정보 유출, 노동자 안전과 생명 방지 총체적 불법 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정보 뚫리고 생명도 뚫렸다 위험의 외주화 속 ‘로켓배송’

유통공룡의 민낯
〈中〉 비용이 된 안전

‘오늘 밤 주문하면 내일배송’ 로켓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배송 기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3370만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대한 청구서가 쌓여있다. 노동계는 쿠팡이 자랑하는 혁신이 노동자와 납품업체,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의 외주화 속에 세워졌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 서비스(CLS)가 운영하는 클렌징 제도는 쿠팡플렉스 기사들에게 수행률, 프레스백 회수율 등 수치화된 지표 달성을 요구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송 구역을 강제로 회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쿠팡로지스틱스 운용 ‘클렌징 제도’ 기사 지표 미달성시 배송구역 회수
택배노조 “쿠팡 ‘죽음의 배송’ 방지”
과로사 주범 ‘클렌징 제도’ 폐기 촉구

이는 사실상 상시적인 해고 위협으로 기사들을 무리한 노동으로 내몰아 올해만 8명이 사망하는 사회적 타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국택배노조는 쿠팡이 ‘죽음의 배송’을 방치하고 있다며, 과로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클렌징제도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7일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강요된 선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쿠팡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침묵을 깨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노조 측은 쿠팡식 로켓배송 모델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과로사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클렌징 제도 폐지 ▲심야·새벽 배송 제한 ▲분류작업 책임 명확화 등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이어 “빠른 배송을 위해 노동자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없다”며 쿠팡이 무한 속도 경쟁보다는 지속 가능한 배송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러한 ‘죽음의 질주’가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적 중립성’ 뒤에 숨은 교묘한 통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통적인 노동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눈앞에 있어 지휘 통제가 가시적이고 분노의 대상도 명확했지만, 쿠팡의 시스템은 알고리즘이 분 단위로 수행률을 추적하며 극도로 통제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는 자유를 부여해 착시를 일으킨다”고 분석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노동자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게 된다”며 “실제로는 전통적 사용자보다 훨씬 정교하고 침투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적 중립성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자율적 선택이 아닌 알고리즘이 설계한 강제노동으로 이어진다. 한 현장 기사는 “알고리즘에 맞추지 못하면 일감이 회수되기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뛰어나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익은 플랫폼이 독점하되, 사고나 과로 같은 위험은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4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

“외국인 발길 돌려라” 우수기업 성장 선순환 시급

코스닥 지수 1000 멀어지나
 李 정부 출범 후 코스닥 26% 상승
 코스피 지수 53%의 절반도 안돼
 “기초체력 좋은 기업 상장 시켜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코스닥벤처투자펀드(코벤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도 연내 확대할 계획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 11월 30일 금융투자협회장 및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코스닥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54%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려나 주가부양에 주력하는 정부가 모험 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코스닥 부흥 작업에 착수하면서,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8, 9일 이틀동안 시가총액은 500조원을 찍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있었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결과는 늘 반짝 급등 후 장기 부진”이었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 기업이 시장에 남아 실적을 증명하고, 그 성과가 곧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그래야 외국인의 발길도 돌릴 수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닥 거래 대금은 하루 평균 11조 2276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거래 대금(평균 13조 5615억원)의 83% 가량이다.

작년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평균 64%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아직 외국인의 적극적인 참여는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들은 이날까지 코스피에서는 4조 32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1323억원 어치 팔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시장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닥 기업 39개의 합산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 3분기 말 2조 8836억원 대비 2조 2691억원으로 21.31% 낮아졌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글뉴스



▲이재명 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 임금 더 줘야” /사진 뉴시스
 ▲대통령실 “李 대통령, 공정위원장 등에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 검토” 지시

▲농어촌공, 내년 예산 1조 늘어난 4.8조…재해예방 농업SOC 확충
 ▲내란재판부·법외곡죄 사법부 반발 확산…與와 전면 충돌

▲자녀 두고 6·25 참전한 故 이재식 일병,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김정은, 푸틴에 ‘러 대사 사망’ 조전…“커다란 상실”